

### 이낙연 전 총리, 워싱턴DC서 특파원 간담회

# “韓정치 길 잃어... 알 깨지지 않으면 외부 충격”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정치권의 혁신을 요구했다. 간담회가 열리기 전 미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와 대담을 진행했다.

#### ▲“국민 마음 둘 곳 잃어... 알 깨지지 않으면 외부 충격”

이 전 총리는 이날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통일된 목표를 잃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의 길을 잃고 국민들은 마음 둘 곳을 잃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기존 주요 정당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못한다면 외부 충격이 생길 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존 정치가 잘해줄기 지금보다는 바쁘다”라고 했다.

양당의 쇄신이 없다면 ‘재외의 길’을 염두에 두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여기저기 활로가 막혀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약간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약탈을 열어가는데) (민중당에 대해) 국민을 향해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여론을 형성한다면 정부에도 정당에도 일정한 영향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이 전 총리는 조지워싱턴대에서 방문연구원으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오는 6월 귀국을 앞두고 있다. 귀국 후 그의 역할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으로 인한 당내 혼란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할 것으로 본다”라며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귀국 후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묻는 말에는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지원하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재차 설명은 아꼈다.

#### ▲“尹정부 외교 구성의 모순... 국민에 낭패감·혼란 컸다”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간략한 평가도 내놴. 먼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두고 “구성 모순”이라며 “한 부분을 놓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다 합치면 이상해지는 것들이 반복된다”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인 핵협약그룹(NCG) 창설이 비핵화 협상 실패 및 북핵 역량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면서도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완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미국의 한국 정부 초청 의혹을 거론, “도청을 미국이 시인하고 사과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관철하고, 악의에 의한 도청이 아닐 거라고 두둔하는 건 국민에 상당한 정도의 낭패감을 안겼다”라고 꼬집었다.

이 전 총리는 “(도청이) 잘못됐다는 것, 유감스럽다는 것,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 정도는 표명했어야 국민들이 납득하기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일 외교를 두고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역사의 청산을 요구받은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국민에 말하는 것, 그것 또한 국민에 크나큰 혼란을 줬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 경쟁이나 국제질서 불안정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면서도 “그에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는가는 정부의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그는 “분단국가로서 평화를 확보하는 일, 동맹 국가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하는 일, 반도 국가로 인접 대륙 국가와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 통상 국가로 무역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동맹 국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연단 오른쪽)가 22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에서 미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와 대담하고 있다.

### “尹정부, 미중 경쟁-국제질서 불안 대처 미흡” 한미동맹과 관련 “미국도 할 말 하는 동맹 원해”

의 역할만 강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처럼 생각한다”라며 “불충분한 생각이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

#### ▲“韓美 동맹서 韓 목소리 안 들려... 할 말 하는 동맹 돼야”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간담회 전에는 미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와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판기념회 겸 대담을 진행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안팎의 위협에 직면했다”라며 “불안하게 지켜왔던 평화와 번영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한·미·일 대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다”라며 “냉전 시대에

미·소 대립의 최전방이었던 한반도가 이제는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한국이 한·미 협력과 한·중 협력의 과실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미·중 전략 경쟁으로 더는 그러지 못할 상황이 됐다”라며 “지금까지 한국의 결정 방식이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신냉전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다른 나라에 양자택일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 능력 역시 견제 받지 않은 채 강화되고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이 전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2번이나 말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북·중·러 연대의 강화를 부르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한·미·일 협력의 강화와 함께 한반도 긴장의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북 대화, 남·북 대화와 안정적 한·중 관계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은 동맹 중시를 말하지만, 이는 미국우선주의에 밀려온다”라며 “한국은 전기자동차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에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지만, 중국 수출의 대폭적 감소에 부딪혔다”라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공조 강화에 집중한다. 그것도 필요하다”면서도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한국도 일본도 중국과 안정적·건설적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미·일 모두의 숙제”라며 “동시에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야 하는 중국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면 한국의 의지를 신뢰하면서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북·중·러 연대의 강화를 부르며

유지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이날 대담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전 총리는 이에 “지금은 커진 게 아니라 안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도 할 말을 하는 동맹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파트너인 동맹국의 지도자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커질 것이다. 미국은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文정부 대북정책 결과 백지처럼 여기는 것 옳지 않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 정책의 골간은 바뀌지 않게 할 필요가 만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권에 따라 정책이 동전 뒤집기처럼 오락가락하면 한미동맹관계에 축적해 쌓일 수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상대를 신뢰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전 정부의 대북 대화를 거론, “그걸 모두 부정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건 더 허무한 결과”라며 “지금 정부가 전 정부의 남북관계 결과를 부정하고 백지처럼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이로운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북한 정찰위성 파괴 조치 준비 명령에는 “막아야 할 정도의 정찰위성이려면 주권 국가로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말하는 인권은 서방적 가치 기준에 의한 인권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우 생존권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그걸 매우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환자 생명 보호 지원

#### 이정린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 의료에 대한 우려 속에 응급상황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응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400회 임시회에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전북은 매년 ‘응급의료 현황’과 ‘이송체계 마련’ 등 조사·연구에 시행계획에 포함하게 되어 구체적인 응급의료 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최형열 도의원 “경사진 농로 주민 안전사고 노출... 개선 시급”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이 비포장도로 곳곳에 요철이 심해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등 주민들의 위험이 노출된 현장을 직접 찾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3일 최 의원은 전주시 삼천동 계룡산길에서 우림로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 약 600m 구간 현장을 찾아 농로 노면 상태 등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이번 농로 포장사업은 농민들의 영농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다”며 “기반시설의 현대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학생 수 감소 대책 · 학생 창의력 제고 사업 발굴을”

####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 심사 전 정책 질의

#### 앞서 실시한 전북도 새만금해안수산국 등 추경 심사서

#### “새만금젼버리기념 식재 전 토양관리 충분히 해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는 23일 자치경찰위원회와 새만금해안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제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서와 도교육청 추경 심사 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먼저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은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분야에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수 소 전용 항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새만금젼버리기념 식재 및 기념 숲 조성 사업의 경우 기념 식재 전 충분한 토양관리를 요청했으며, 기념식수 시에도 수종 그룹별 식수 등의 방법을 모색해 고사하는 나무가 없도록 꼼꼼한 관리를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은 수산물 상생형인 지원사업 및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할인방식보다는 할인금액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부, 도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모색을 당부했다

오후에는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시작으로, 도교육청 박주용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열린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학생 수의 주된 원인은 인구소멸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돌봄 등의 교육비를 지원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작은 학생 수에 따른 학교 통폐합의 경우 필요시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학생 수 감소 대응 및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내 학생들이 다양한 취업 단속한 환인방식보다는 환인금액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부, 도내 경제에

과 연계해 학생들의 취업을 장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은 학교 교장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등과의 대화에서는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교장은 학교의 대표 주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문했으며 60명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 추진 중인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 추진에 따른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울림학교 추진 시에는 이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최근 급속도로 번지는 마약문제와 관련, 학교폭 및 학원과 연계한 포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약 노출 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마약관리 로드맵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부모의 원동기 장치면허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사용 방지에 대한 계도가 시급하다고 질타했으며, 일부 학생들의 불법 운라 인 도박도 마찬가지로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 계도를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에듀테크 사업 추진 관련,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학생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구매를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새만금젼버리기념 식재 참여수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젼버리에 임하는 스카우트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외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요청했다.

또한 과별로 편성돼 있는 홍보예산을 지적하며,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예산 편성을 주문했으며, 스마트 폰 등 영상매체 활용한 홍보 방안도 색다르다. /김재훈 기자